“尹, 검수완박 합의 개입·주문 없었다…재논의도 당의 결정”

“지난 22일 지방 일정 중 전화로 보고받았을 뿐”
尹 검찰 수사권 분리 부정적…“당은 거수기 아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국민의힘의 ‘재논의’ 결정 또한 “당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할 때 윤 당선인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교감이라는 단어가 미묘하다”면서도 “10여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해야 할 당선인이 국회 상황에 대해 몰랐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 일이고, 상황은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중재안 합의 당일 부산에서 민생일정을 하고 있었다”며 “일정 중에 전화통화를 통해 잠시 보고 들었다. 합의 과정과 결정의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보고 당시 윤 당선인의 반대 의견이 피력됐음에도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받아들였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향후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합의에)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합의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의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움직임에 반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말을 남기며 검찰총장 임기 중에 사퇴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후에 합의안을 번복한 것은 당이 알아서 행동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말하며 “정당은 청와대의 뒤처리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국회는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니다. 정당이 여론에 부합하는 방향을 찾아가는 논의를 하는 중에 여러 갈래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합의 재논의’가 부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이슬 기자

장제원 “文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믿는다”

“정치권이 헌법 지킬 책무 져버리는 건 납득 안돼”
“개혁 미명 아래 ‘검찰 무력화’는 민주주의가 아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중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바꿔놓고, 흔들어 놓고,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검수완박법안을 지금 당장 언제까지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국민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고 저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져버리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국회의원으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는 거 아닌가. ‘불수사 특권’을 가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장 비서실장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하는 건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어떤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절에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 통폐합을 하지 않았냐. 뭐가 미우면 뺏어버리고 없애버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장 비서실장은 “정치 권력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좀 더 민생에 도움이 되고, 또 좀 더 정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준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고. 뺏어버린다. 이런 방식은 파괴적인 방식 아니겠냐. 국민들이 그걸 원하나. 국민들의 민심을 즉시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의 세부내용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윤 당선인은)’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 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다수의 정당 힘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겸손하고 슬림화된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식이 아니라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조율하고 확정된 정책들을 좀 더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공부하고 홍보하는 역할에 정무적 역할을 많이 하면서 각 부서가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건의한 대통령실 교육과학수석 신설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교육부가 처절한 마음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체 개혁이 우선이다. 그 이후에 교육과 수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차후에 논의해야겠다”고 전했다.

서선옥 기자

기시다 일본 총리 “한일·한미일 협력 이정도로 필요한 때 없어” 필요성 강조

총리관저서 협의단 25분간 면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 협의 대표단과 면담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협의단과 약 25분간 면담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단은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협의단은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새 정권의 대일 관계 기본 방침 등을 일본 측에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정세와 중국의 군사적 확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을 염두에 두고 “규정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국제 상황에서 일한(한일)·일미한(한미일)의 전략적인 협력이 이 정도로 필요한 때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일한의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일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일한 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단은 지난 24일 일본을 방문했다. 28일까지 닷새 간 체류한다. 지난 25일에는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과 잇따라 면담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협의단 면담은 시기 상조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주변에서는 협의단의 하야시 외무상과 면담에서 “관계 개선 의욕이 느껴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기시다 총리가 면담에 응했다.

김재환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